

가전업계, 소비침체 칼바람… ‘플랫폼·AI’ 돌파구 모색

K-기업, 올해 수익성 회복 초점

삼성전자 ‘비전 AI 캠페니언’ 강화
LG전자 인도 등 신홍시장 다변화

국내 가전업계가 4분기에도 실적 한파를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더해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원가 부담 증가, 미국 관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이에 국내 가전 기업들은 매출 확대보다는 단기와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2026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 조사(EBSI)’를 통해 가전 부문의 수출 체감경기가 97.9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96.5) 대비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수출 여건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수출 여건 개선이 더딘 가운데 내수 시장도 위축된 흐름을 보이면서 가전업계의 실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LG 올레드 에보 W6.

랫폼 웹OS26에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외에도 구글 제미나이를 더해 맞춤형 AI 서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전 분야에서는 인도 등 신홍시장을 성장 축으로 삼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방갈로르 등에 R&D 센터를 세워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맞춤형 가전 개발에 매진 중이다.

LG전자는 인도를 주요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인도 여성들의 일상복 ‘사리’의 옷감을 섬세하게 관리해 주는 세탁기, 수질 및 수압 상황을 고려해 UV 살균과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탑재한 정수기 등 생활 환경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 비수기 영향과 대외 변수들이 겹치면서 가전업계에 실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은 매출 확대보다는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방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잠정 발표했다. 사업부별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X) 부문이 실적을 견인한 반면 영상디스플레이(VD)와 생활가전(HS) 사업본부의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3조 8538억원, 영업손실 1094억원으로 잠정집계 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약 200억원대 적자로 분석됐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밟는 수준이다. LG전자가 분기 기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9년만이다. 업계에서는 생활가전(HS) 사업본부의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전업계가 부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에 가전업계는 매출 확대보다 수익성 방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TV 시장의 정체

와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플랫폼 경쟁과 AI 기능 차별화가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TV 출하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하드웨어를 넘어 플랫폼과 AI 기반 서비스를 통한 반복 수익 창출이 프리미엄 TV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AI 플랫폼인 ‘비전 AI 캠페니언’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퍼플렉시티 등 주요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LG전자는 2026형 LG TV에 탑재되는 독자 스마트 TV 플

SK그룹, 올해 첫 토요일 사장단 회의

中 사업전략 재점검… 생산성 혁신방안 모색

최창원 SK수펙스 의장 등 참석
그룹 차원 상생협력체계 고도화

SK그룹이 올해 처음으로 토요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중국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생산성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SK가스 사옥에서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차원의 전략글로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을 비롯해 서진우 중국총괄 부사장, 장용호 SK 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SK 사옥 전경.

사장단은 중국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상생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갈등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 기대가 커진 점도 중국 전략 재점검 배경으로 거론된다. 앞서 SK그룹은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1차관을 SK차이나 신임 사장으로 영입하며 중국 사업 관리와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전략과 함께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지속과 생산성 혁신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의사결정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행 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상생 협력 방안 역시 함께 검토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명 중 1명 이상(26.8%)이 경기도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두고 있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미만의 서울(18.1%)과 대비된다.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경기는 17.7%로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 그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서울보다 경기에서 훨씬 많았다.

전국 총인구도 지난 15년간만 놓고 보면 증가했다. 지난해 말 5111만 명으로, 2010년 10월의 5047만 명보다 64만 명 많다.

그러나 총인구 역시 정점을 달한 2019년 11월(5185만 명)에 비해서는 74만 명이나 줄었다.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광주, 경북 등지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울 인구 15년새 100만명 이상 감소

고령화·집값 상승 등 감소세 영향
같은기간 경기 인구 200만명 증가

서울 인구가 지난 15년 사이 무려 1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 총인구 감소보다 9년 앞서 시작됐다. 반면 경기 인구는 같은 기간 20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수도 거주민 수급감의 배경에는 고령화뿐 아니라 집값 급등에 따른 시민 대수의 타 지역 전출 등이 짚힌다.

11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인구는 92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6130명,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3만 2000명 감소했다.

2010년 10월 정점을 찍고 쭉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당시 1032만 명에 달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102만 명 적다. 15년 만에 9.9% 감소한 것이다.

그 이전의 역사적 정점은 1992년(1096만 명)이었는데, 증가세가 멎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완만히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 흐름은 끝을 맺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유지될 시 서울 인구는 2029년 또는 2030년에 800만 명대로 내려앉게 된다. 900만 선이 깨지면 1980년대 초 수준까지 퇴보한다.

이에 반해 경기 지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373만 명으로, 15년 전(1174만 명)과 비교해 198만 명이나 증가했다. 경기 인구는 기록을 매월 경신

쟁점법안 추진·지방선거 실무 등 역할 막중

〈2차 특검·반도체법 등〉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공천현금 수수 의혹 수습 등 과제 산적
리더십 증명시 연임 가능성 열려 있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종 쟁점법안에서 리더십으로 의원들을 이끌고, 대야 협상력으로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외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실무를 맡게 돼 역할이 중요하단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처리에 성공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이끌면 이를 발판으로 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현행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연임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청래 당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민주당이 처리하는 새해 첫 법안으로 밟히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의사를 밝힌 만큼 치열한 여야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 공천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임 원내대표는 3개의 특검법안을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도 설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연말 이어진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인해 민생·경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3차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하지만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도 새롭게 뽑히는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임 원내대표는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이 민심과 괴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당의 입법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간 공천현금 수수 의혹이 터진 후 사퇴한 만큼, 후임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해당 의혹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요 과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적으로 탈당의 사가 없다고 밝힌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 압박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원내대표 선출 다음달인 12일 김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임 원내대표는 당에 드리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9명 중 4명의 당 지도부를 뽑는다.

당내에서 계파색이 엿은 것으로 평가 받는 원내대표 후보 4명이 출마해 관리형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계 후보 2명과 친청계 후보 2명이 입후보해 친명·친청 후보가 모두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